

신용회복 '골든타임' 잡는다

금융위원회 '연체위기자 신속지원' 도입 미상각채무도 원금감면...최대 30%까지

연체 전 ~ 연체 30일	연체 90일 ~ 상각	상각 후	상환불능
[연체위기자 신속지원 도입] - 연체발생 이전에 상환유예(6개월), 분할상환(10년) 등 신속지원	[미상각채무 원금감면 도입] - 채무과중도에 따라 0~30% 감면	[원금감면율 확대] - 최대 원금감면율 60%~70% 상향 - 채무감면을 선정 체계 개선	[취약채무자 특별감면] - 일정기간 성실 상환시 잔여채무 면제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차주가 저신용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연체 발생전부터 일정 기간 채무 상환을 유예해주는 '연체위기자 신속지원 제도'가 올해 안에 도입된다.

불가피하게 연체에 빠진 경우라도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채무감면율도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의 후속대책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18일 발표했다.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는 단기연체자(연체 31~89일)를 대상으로 한 프리워크아웃과 연체 90일 이상 채무불이행자를 대상으로 한 개인워크아웃 등의 채무조정제도를 운영 중이다.

그러나 연체 30일 이전에는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데다가 연체 30일 이후에는 신용등급이 하락하며 연체 부담도 급증한다. 연체 30일 이전이 '신용회복의 골든타임'인 셈이다.

금융위는 신용회복의 골든타임을 잡기 위해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연체발생 전이나 연체 30일 이내 구간에 있는 연체위기자가 선제적으로 신용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채무를 상환유예해주는 방식이다.

지원대상은 일시적 소득 중단·감소가 확인된 다중채무자다. 구체적으로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3개월 이상 입원치료를 요하는 질환자 ▲대출 당시에 비해 소득의 현저한 감소로 구제 필요성이 인정된 자 등이다.

이 가운데 대출 당시보다 소득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는 신용 7등급 이하이거나 다중채무 가운데 하나라도 1~30일 동안 연체중인 채무자, 최근 6개월 이내 5일 이상 연체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등이 해당된다.

지원내용은 '일시적 상환위기 채무자'나 '구조적 상환위기 채무자'에 따라 달라진다. 소득감소만 해소되면 정상적으로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최대 6개월간 원금상환이 유예되며 이 기간 약정금리로 거치치지만 납부하면 된다.

대출구조 자체의 문제로 인해 소득감소가 해결되더라도 정상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채무자에게는 최대 6개월의 원금상환 유예에 더해 최대 10년간의 장기분할상환이 추가로 허용된다. 장기분할상환의 이행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금리도 최대 15%로 제한된다.

일시적·구조적 채무자 모두 채무조정 신청 이후에는 기존 연체에 대한 연체일 가산을 중단해 연체 30일부터 적용되는 단기연체정보의 CB사 등록을 방지토록 했다. 예컨대 연체 발생 4일 후 신복위에 신속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신청시점 이후에는 연체일수가 더 이상 누적되지 않아 CB사에 연체정보가 통보되지 않는다. 단 채무조정기간 중 발생한 신규연체 정보는 원칙대로 통보된다.

이미 연체에 빠진 차주에 대해서는 채무감면을 대폭 늘려 정상화를 도울 수 있게 '미상각채무 원금감면'을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회사가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장부상 손실로 처리하는 것을 채권 '상각'이라 한다. 연체 후 6개월에서 1년이 넘는 채권은 상각처리되는 게 보통이다.

현재는 상각처리가 되지 않은 채무에 대해서는 채무조정시 원금을 감면해주지 않고 있지만 금융위는 연체 90일 이상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 신복위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미상각채무에 대해서도 최대 30%까지 원금감면을 허용하기로 했다.

원금감면율은 채무과중도에 따라서 차등 적용된다. 단 고의적 연체를 방지하기 위해 채무조정 신청일



금융위원회 최준우 금융소비자국장 이 15일 오후 서울 중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로부터 1년 이내 대출의 미상각채무는 원금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각처리가 된 채무에 대해서는 채무원금 감면을 범위를 현행 30~60%에서 20~70%로 확대해 더 갚을 수 있는 사람이 더 많고 어려운 사람은 덜 갚도록 개편한다. 감면을 산정시 채무원금과 가용소득 외에도 재산액, 연체기간, 소득안정성 등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도 적용한다.

상환능력이 결여된 취약계층에 대해 최소한의 상환의지만 확인되면 잔여 채무를 면제해주는 '취약채무자 특별감면' 제도도 시행된다. 사실상 상환능력이 없는 취약채무자의 경우 고정적 소득이 있어만 이용할 수 있는 법원의 개인회생·파산이나 신복위의 개인워크아웃 등으로는 채무조정을 받기 어려워 서다.

지원대상은 ▲기초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장애인연금수령자 ▲고령자(만 70세 이상) ▲장기소액연체자(채무원금 1500만원 이하에 채무 10년 이상 연체) 등이다. 순채산이 일정액 이하여야 하며 고령자와 장기소액연체자의 경우 소득도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한다.

이들에 대해서는 채무원금을 상각채권의 경우 70~90%까지 미상각채권의 경우 30%까지 감면해준다.

채무원금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채무조정으로 감면된 채무를 3년간 이상 연체 없이 성실상환해 50% 이상 상환하면 남은 채무는 면제해준다.

이같은 조치들을 통해 신복위의 채무조정 평균 감면율은 현행 29%에서 최대 45%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와 취약채무자 특별감면 프로그램은 6~8월 중 시행하고 상각채무 감면을 조정은 3~4월 중 조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미상각채무 원금감면은 기획재정부와 협의 후 연내 도입할 방침이다.

뉴스스

“현금 300만원 드려요” 증권사,신규고객 확보 ‘출혈경쟁’ 치열 “다양한 혜택” vs “고객 피해로 이어져”

신규 고객 확보를 위한 대형 증권사들의 출혈 경쟁이 첨박경이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지난해 배당사과 오류로 내려졌던 일부 영업정지 조치가 지난달 27일 풀리자마자 평생거래수수료 무료 전략을 내놨다.

삼성증권은 다음달 말까지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고객에게 온라인 국내주식 수수료를 평생 면제해주는 ‘영원히 0원’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삼성증권은 증권사중 가장 먼저 평생주식거래수수료 무료를 도입한 NH투자증권과 똑같은 전략을 추진해 신규 고객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2025년까지 비대면 계좌를 개설한 신규 및 휴면 고객에게 무료수수료를 제공하는 미래에셋대우와 10년간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KB증권과 다른 길을 택한 셈이다.

이 같은 삼성증권의 공격적인 마케팅 전개에 NH투자증권도 즉각 반응했다.

모바일로 주식 거래를 개시하면 수수료료를 평생 면제 주는 이벤트를 기간 동안 해외 주식에 처한 업체들의 참전 선언도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 미래에셋대우는 해외주식 거래고객을 대상으로 ‘해외주식 황금패지 이벤트’를 이달 말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이벤트 기간 동안 해외 주식을 3000만원 이상 순매수한 고객 전 원에게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 3만원 상당을 제공하는 한편 1000만원을 초과한 고객에게는 최대 50만원의 모바일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KB증권 역시 3월 말까지 ‘글로벌 친선’ 이벤트를 진행한다. 행사기간 동안 글로벌 원마켓 서비스(글로벌 5대 시장을 원화로만 거래하는 서비스) 신청 고객 중 1억원 이상 해외주식을 거래한 고객에게 거래금액 1억원 당 추천권 1매를 제공한다.

이 같은 증권사들의 과도한 출혈경쟁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먼저 타사 주식 입고 유치전 등은 연중 행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입장에서 다른 증권사로 옮기면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타사 주식 입고 유치전은 고객 유치를 위한 증권사들의 보편적인 이벤트”라며 “증권사는 주식이관으로 신규 고객을 유치하고 고객들은 증권사 갈아타기를 통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고객의 경험이나 현금 등을 이벤트가 증권사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투자자들 모두가 이벤트 혜택을 누릴 수 없는 만큼 충분히 고심하고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증권사들이 무리한 현금 이벤트를 벌일 경우 회사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투자자들도 고가성 이벤트 상품에 현혹돼 증권사를 계속 이동하며 투자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한편 증권사들이 고객 유치를 위해 현금 이벤트를 벌일 경우 회사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투자자들도 고가성 이벤트 상품에 현혹돼 증권사를 계속 이동하며 투자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한국산 분유 찾는 中·김치 찾는 日

1월 농식품 수출액 5억7600만 달러...역대 최대치 경신

우리 수출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농식품 수출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모양새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농식품 수출액은 5억7600만 달러를 기록 1월달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농식품 수출액은 지난해 1월(5억4400만 달러)에도 최대치를 찍었는데, 1년 만에 5.9% 증가하면서 최대치 기록을 다시 쓴 것이다.

특히 우리 농식품 수출의 3분의1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일본과 중국 시장에서 견조한 성장세가 이어졌다. 대일본 수출액은 전년 동월대비

14.7%, 대중국 수출액은 16%씩 증가했다.

자세히 들여다 보면 일본 시장에서 김치 수출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전년 동월대비로 30.2%나 증가한 540만 달러치를 수출했다. 농식품부는 “일본 최대 유통업체인 이온리테일의 전국단위 판촉행사와 발효식품 효능에 대한 현지 언론보도 등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시장에선 조제분유의 수출액이 43.9%나 증가했다. 최근 중국에 영유아 전문 온오프라인 매장이 늘어나는 추세인 가운데 한국제품이 중국의 프리미엄 분유시장을 공략

했던 것이 주요했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분유 외에 신물용 홍산 등 인삼제품도 중국시장에서 63.4%나 늘었다.

전반적으로는 딸기 등 채소류와 인삼, 김치 등 주력 신선농산물 품목이 대부분 증가하면서 수출 효소를 견인했다. 신선농산물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로 14.4%나 성장해 1억2000만 달러를 달성했다. 가공식품 수출은 4억5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대비 3.9% 증가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상반기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중국 상하이에서 현지 유통매장 21개소가 참여하는 대규모 물산전을 개최하는 등 온오프라인 판촉행사를 열 계획이다.

이재욱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향으로도 수출 확대를 위해 1분기 집중 판촉, 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산부 배려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